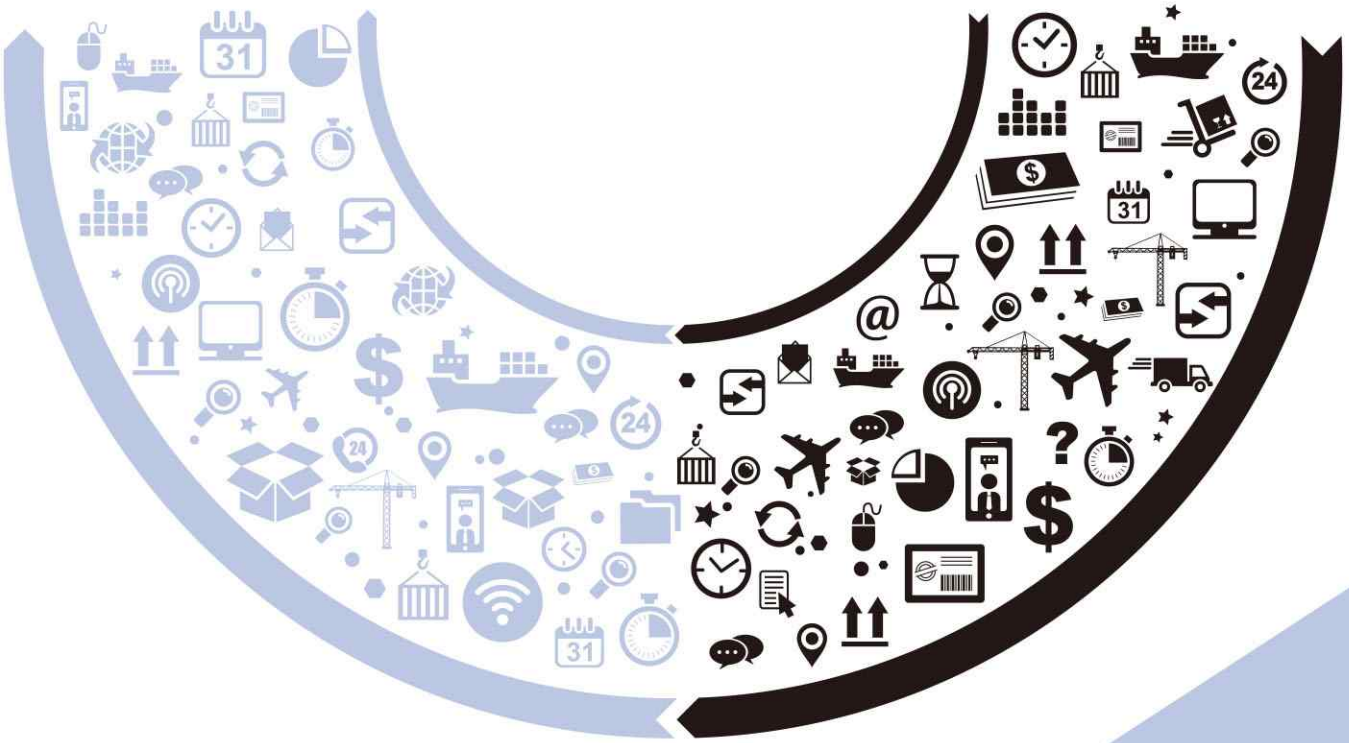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Global Strateg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과 추진방향

Ⅱ. 극동개발정책의 의미와 제도

4 1.『불균형 해소』에서『통합적 지역발전』까지 극동개발의 함의
15 2. 극동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26 3. 극동발전의 전략적 제도와 도구

Ⅲ. 주요국 협력현황과 평가

46 1. 중국의 극동정책과 협력현황
55 2. 일본의 극동정책과 협력현황

Ⅳ. 러시아 극동정책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

참고문헌 / 67

요 약

□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과 수단

○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편입을 노리는 『통합적 지역발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전략에 근거

* 1990-2000년대의 전략은 지역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을 인정하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정책간 혼선
* 국내적으로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연방관구와 극동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격차

○ 극동지역 통합발전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정부차원의 개발 프로그램과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지속

*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등 극동개발 프로그램 마련
* 정부는 극동개발부와 극동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경제특구(투자유치제도) ▲극동개발펀드, 러·중 농업펀드(재원) 등을 운영

□ 동아시아 주요국의 극동협력 정책

○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인프라 개발(동북 3성 연결)·농업개발·제조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확대

* 『ESPO 원유운송라인』·『프리모리에 1·2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협력사업
* 최근 중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

○ 일본의 극동정책은 에너지개발 중심에서 포괄적 협력전략으로 변화

* 2016년 5월 러·일 정상회담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8대 협력 사업을 제시하면서 협력 다변화

□ 러시아 극동정책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는 투자유치를 위해 타(他)동아시아 특구와의 차별화 요인을 도출하고 기반 개선을 가속화해야 하며 한국은 개발초기 극동지역을 거점화하는 전략추진필요

- 한국은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연방관구와 극동지역의 전략을 이원화(two track)

*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진출에 대한 전진기지 역할, ▲인프라 개발 등 프로젝트 참여, ▲동북아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체제 구축과 확장에 참여(제조업) 등으로 추진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러시아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한국의 대(對)러시아 진출에 있어 주요 관심지역

○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상존

-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고려인들의 주요 정주지역 중 하나이며 대륙진출의 거점역할

  * 특히 사할린 섬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의 집단 정착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

-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후 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등 각 연방으로 이주하면서 각 공화국에 정착

○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도 극동지역은 우리기업의 러시아 수출에 있어 오랫동안 관문역할을 해왔으며 동시에 주요 진출 지역가운데 하나

- 소비에트 해체이후인 1990년대 극동지역의 나호트카(Nahotka) 지역 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제조업 투자를 추진한 바 있음.

-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Vostochniy) 항구 등은 한국의 러시아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극동지역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TSR)를 통해 러시아 주요 소비지로 화물을 운송하는 출발지 역할

□ 2010년대 이후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가속화와 한국의 협력

○ 1990년대 소비에트 해체이후 영토가 넓은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닿지 않아 통제가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2000년

대 이후 극동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증대

- 1990년대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초기로 중앙정부에 대한 탈집권화로 인해 극동지역 등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시기로 중앙정부의 극동지역 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재

- 2000년대 러시아는 지방에 대한 정책이 혼선을 빚으며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불균형을 인정하는 시기가 나타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

o 푸틴 집권 3기인 2010년대 이후 극동정책은 경제적 불균형해소와 지역의 통합발전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편입이 목적

- 불균형해소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추격(catch-up)'과 편입이라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극동개발 추진은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

- 정부는 극동개발에 있어 다양한 제도와 정부기구 등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도 극동지역은 대륙진출의 교두보로서 핵심협력지역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개발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의 투자와 기업참여는 성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

*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기업 내의 생산·소비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음.

-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나친 독주는 러시아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일본과는 북방영토의 영유권 문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반면, 한국의 참여는 러시아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

* 한국은 중진국(middle power)으로서 지역 패권과 관련한 껄끄러운 이슈가 없고 한국의 기업은 기술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어 극동개발에 적합하다는 입장임.

2 연구 목적과 추진방향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특징을 이해

○ 러시아에 있어서 극동개발 정책의 의미는 단순한 지역개발의 목적을 넘어서 국가차원의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하고 그 배경을 분석

- 1990년대 이후 극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는 지경학적으로 러시아의 대(對)동북아 협력전략의 조정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과거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의 목적과 현재 동 정책의 목적 및 방향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차이로 인한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정책이 갖는 의미와 활용방안을 제시

○ 극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제도적 마련과 정책도구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정책과 도구들이 갖는 의미를 도출

- 극동개발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전방위적인 제도와 기구들을 활용하고 있어 각 제도의 현황과 함의를 분석

□ 극동지역개발에 의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시사점 도출

○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진출전략 비교를 통해 한국의 극동지역 개발 및 참여를 위한 시사점 도출이 목적

- 극동지역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진출 현황과 진출방향을 비교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 극동지역 주요 투자 진출국인 중국과 일본의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

-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 진출의 협력방안 설정

II 극동개발정책의 의미와 제도

1 『불균형 해소』에서 『통합적 지역발전』까지 극동개발의 함의

□ 지역별 『불균형 해소』의 의미와 대안

○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지역별 경제성장과 발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규모에 비해 산업발전이 미약한 경제구조

- 러시아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산개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가 밀집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 모스크바 중심의 서부지역과는 달리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경제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음.

- 경제규모에 비해 자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산업부문의 발전이 느림.

  * 러시아는 수출에서 자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있으며 GDP에서의 비중도 10%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자원의존국

○ 국가차원에서 불평등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원자재 의존적인 경제구조이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 확대에 영향[1)]

- 첫째, 원자재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 자원개발 분야 또는 개발과 연계된 금융, 또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등 가격상승의 수혜가 나타나는 특정 분야나 지역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도록 기능

- 둘째, 원자재는 일종의 자산(asset)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체로 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의 증식은 소득(income)의 증가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향을 보임.

1) Thomas F. Remington, "Economic Inequality in Russia: Sources and Consequence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87,* July 2016, p. 5.

- 국가 내부적으로 불평등 구조의 확대와 고착화는 중산층 감소와 맞물려 사회 불안정성의 증대, 계층이동성의 감소와 이타적인 공공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의 여론조사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2009년 48%에서 2016년에는 69%까지 크게 증가

○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약 4개의 단계로 구분가능[2)]

- 1990년대는 시장경제도입 초기로 1990년대 말까지 중앙정부에 대한 분리주의 및 탈집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및 혼란으로 사실상 국내 불균형 해소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던 시기

- 푸틴 대통령 집권초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은 정권초기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균등화 정책이 권력의 수직적 통합과 연계된 시기

- 2000년대 후반은 중앙과 지방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인식하고 불평등 해소보다는 불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던 시기

-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이후는 사실상 정부의 지방 균등화 원칙이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으로 집중되면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역발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전략이 추진되는 시기

○ 경제구조의 원자재 의존이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때, 정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제조업 육성을 통한 천연자원의존 감소 및 지역불균형 완화추진

2) 김상원(2010)과 김영진(2014)은 Марченко Г. и Мачульская О.(2005)의 글을 준용하여 해당 시기를 ①1990년대 초-중반, ②1990년대 후반, ③2000년대 초-중반, ④ 2000년대 중반 이후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필자는 1990년대를 1단계로, 그 이후를 3단계로 세분화

-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산업구조 개혁과 산업다각화는 2000년대 초·중순부터 본격화

〈 표 1 〉 2000년대 러시아 산업정책 형성 단계

시기	우선정책	특징	재원 (Resources)	관계 모델 (Relations Model)
2000-2003	시장제도 개발과 구조개혁	연성규제(soft regulation)	제한된 예산	대기업과 국가의 밀착형 협력
2004-2008	경제 다변화와 혁신 촉진	수직적 분야별 정책(Vertical sector policy)	상당한 예산	'수직적 권력' 공고화
2008-2009	사회 안정	수직적 보완 정책(Vertical Compensatory policy)	급격한 예산 제한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 국가 지지
2010-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재산업화, 투자환경 개선 등	기술 산업 정책	적정한 예산	정책 결정 접근 증대

* 자료: 한홍열 외, 유라시아 산업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현재 러시아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러시아 경제에 혁신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하고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산업간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음.

- 대표적인 정책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콜코보(Skolkovo) 혁신센터 설립으로, 동(同)혁신센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IT, 핵융합 기술, 에너지효율 및 절감, 우주기술, 의료기술 등의 신산업 육성 목적

□ 불균등한 국내 상황: 러시아 서부지역과의 비교

○ 극동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

아 서부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표 2 〉 러시아 행정관구 지표별 비중(2014년)

(단위: %)

구분	영토	인구(2015년)	지역총생산 (2013년)	상품소매	투자	수출	수입
중앙	3.8	26.6	35.0	34.2	25.3	51.3	60.6
모스크바시	0.01	8.3	21.5	16.8	10.9	46.3	43.8
북서	9.8	9.5	10.3	9.0	10.0	11.2	19.0
남방	2.5	9.6	6.5	9.1	9.4	4.1	3.9
북카프카즈	1.0	6.6	2.5	5.1	3.8	0.3	0.7
프리볼시스키	6.1	20.3	16.0	18.4	17.4	12.8	6.2
우랄	10.6	8.4	14.1	9.2	17.1	7.6	3.0
시베리아	30.0	13.2	10.2	10.2	10.6	7.0	2.8
극동	36.0	4.2	5.4	4.0	6.0	5.8	3.7
크림	0.2	1.6	-	0.7	0.2	0.0	0.1

* 주: 모스크바시 지표는 중앙관구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표기

* 자료: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5.

- 러시아 전체 영토에서 극동지역은 36%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비중은 4.2%에 그치고 있어 모스크바가 위치한 중앙관구가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집적돼 있는 상황과 대비

  * 더구나 극동지역의 인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는 중앙관구나 북서관구 등과는 대조

-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ion)』은 중앙관구가 전체의 35.0%를 차지하는 가운데, 극동지역은 북카프카즈 지역에 이어 5.4%의 낮은 지역생산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상품소매 비중이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구가 약 23만 명인 크림지역을 제외하고 극동지역 인구는 약 700만 명에 그쳐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

- 다만 투자와 수출부문 비중이 대체로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은 이유는 극동관구에 속한 사하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Саха)나 사할린 주(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가 천연자원의 주요 매장지로 자원개발 투자 및 수출이 많기 때문

  * 2014년 기준 두 지역에 대한 투자는 약 4,125억 루블로 극동지역 전체투자의 50%를 상회하는 수준

o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타 러시아 지역에 대한 상대적 낙후성과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극동개발 정책시행을 강조

-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시베리아 지역 등의 지역적 낙후성 및 타 지역과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지역개발 정책의 시현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

  * 주요 지역개발정책으로 언급한 전략으로는 ▲산업중심도시의 현대화, ▲주변부 산업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신성장거점 육성, ▲교통·운송망 건설 등을 언급

- 2013년 7월 13일 사할린지역에서 있었던 포괄적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푸틴대통령은 “극동지역의 견조한 성장은 전체 국가발전에서의 우선과제이며 러시아 경제·사회의 균형성장에서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밝힘.[3)]

- 2015년 9월 제 1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대통령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분야로 ▲선박건조, ▲야금,

3)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ёт о совещанииоком плксном соци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6, July, 2013,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8824, 검색일: 2016년 12월 26일)

▲목재가공, ▲운송, ▲에너지 등의 산업분야를 지목하면서 이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극동지역 경제의 자립기반을 조성해야함을 강조

-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제 2차 동방경제포럼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과 캄차카 반도의 성장 잠재력을 지적하면서 인프라 개발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연설

- 푸틴 대통령의 지속적인 언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상정

* 그러나 실제로 2000년대 후반의 정부정책은 불균형 해소와 용인의 사이에서 혼선을 빚으며 오히려 불균형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음.

o 러시아 타지역에 대한 극동지역의 경제력 격차는 궁극적으로 지역 생활수준을 저하시켜 타 지역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촉발

- 극동지역은 1990년대 러시아 체제전환 시기부터 경제력이 집중된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연방관구와 경제력 격차가 대두되었던 지역으로 경제력 격차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음.

- 극동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은 지역생활수준의 감소와 함께 중앙과의 지리적 거리감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소외감을 촉발시키고 이에 따른 타 지역으로의 주민유출 등을 불러일으켰음.

- 극동지역의 인구 유출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감소와 소비시장 축소, 지역 총생산 저하 등의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정치적으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도록 함.

□ 극동지역에서 중국 변수와 러시아의 대응

○ 극동지역과 접하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에 비해 극동지역의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대한 러시아의 불안감 지속

- 극동지역의 총 인구수는 약 700만 명 정도로 인구 분포가 1㎢ 당 1.2명에 불과한 반면, 극동지역과 국경을 면한 중국 동북 3성의 인구는 1억 명을 상회하며 1㎢ 당 124명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인접한 지역의 인구 격차와 더불어 매년 중국으로부터 극동지역에의 인구유입이 매년 약 10만 명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러시아의 관점에서 '중국의 침투(Chinese Invasion)'와 중국인에 대한 공포(Xenophobia)가 존재하고 있음.

  *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은 ①상인(traders), ②노동자(laborers), ③학생 및 지식노동자(students and knowledge workers)의 크게 3가지로 분류 가능[4)]

- 중국 상인들은 러시아의 시장에서 주로 의류나 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일정기간의 계약을 통해 러시아 내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지에서 일하고 있음.

  * 중국인 학생들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어학연수를 위해 극동지역에 대거 유입되었으나 사회혼란기에 현지에서 상업을 하는 등 정착한 경우가 많음.

- 상인들의 경우 시장에서 러시아 상인들과의 이권문제에, 노동자들은 일부 러시아 노동자들과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러시아인과 중국인의 갈등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발생

- 일부 중국인과의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온라인상의 '반중국(anti-Chinese) 커뮤니티' 등을 통해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을 구성하는 등의 활동 지속

---

4) Maria Repnikova and Harley Balzer, "Chinese Migration to Russia: Missed Opportuniti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urasian Migration Papers No. 3*, 2009, pp. 16-20.

○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인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짐.

- 극동지방 정부는 증가하는 중국인의 극동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2007년 법제를 마련하여 최소 수준에서만 중국인의 노동이주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전환하였음.

-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 극동지방 정부는 중국인의 극동지방 유입 제한에 따른 노동인력 공백을 염두에 두고 해외거주 자국민의 자국으로의 귀환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

- 그러나 2000년대 후반이후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중국의 경제적 역할 없이는 사실상 극동개발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폐기

  *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국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나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투자와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보다는 우호적 감정이 증가

□ 극동지역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과거의 극동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과 불균형 정책이 반복되면서 혼선을 빚었으나 새로운 극동정책은 지역균형과 통합적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극동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

  *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방향이 선회하였으나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많다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대두

- 푸틴 정권 1·2기의 정책은 지역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극동정책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음.

  * 그러나 2기 중반이후는 지역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노선변화

- 이후 메드베데프 정권 시기의 지역 정책은 사실상 기업의 투자유치를 핵심으로 한 지역 불균형 정책이 중심이 되었으며 거점지역을 '성장 동력(locomotive of growth)'으로 삼아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전략

  * 이에 따라 메드베데프 정권시기 지방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였음.

- 정부정책의 혼선에 대해 야쿠닌(Vladimir Yakunin) 전(前)철도청장은 "러시아 지역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장기적인 개발정책의 부재이다."라고 언급함으로[5]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

○ 푸틴정권의 극동전략은 2010년대 이후 사실상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발전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추격과 편입이라는 복합적인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2000년대 러시아 정부의 극동전략은 국내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극동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인정을 오가는 혼돈의 지역개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010년대 이후부터 다시 지역격차 해소로 무게중심 이동

- 2000년대의 정부정책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2010년대 극동개발정책은 극동지역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통합적 지역발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을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

  * 정부의 재원투자 확대와 함께 대외개방을 통한 투자유입 증대로 발전이 더딘 지역경제를 단기간에 동아시아 지역경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 그림 1 〉 러시아 극동지역정책의 변화

5) Nadir Kinossian, "Stuck in transition: Russian regional planning policy between spatial polarization and equalizatio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4, No. 5-6, 2013, p.618.

*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2010년대 이후 러시아 정부의 극동정책은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극동지역 전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해소 및 투자유치 방안도입 등으로 지역 전체의 개발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음.

□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과 추격전략

○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극동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주요 과제

- 러시아 극동지역의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은 1990년대 체제전환이후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에서 추진해 온 제조업 육성정책과 동일맥락

- 인프라 개발과 세제혜택을 통한 외국계 기업들의 제조업 투자 및 생산기지화가 이루어진다면 극동지역은 단기간 내에 경제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아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현재 동아시아 경제권은 전자·기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분업체제가 성립되어 있으나 극동시장은 단순히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는 시장에 지나지 않음.

-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경우 제품생산 가치사슬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부품 수출 → 중국의 완제품 생산 등의 가치사슬체계가 존재

*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가치사슬은 전자, 의류, 경공업 제품 등에서 나타남.

- 현재의 극동시장은 동아시아 제품생산 가치사슬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력 산업군 생산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 가운데 극동지역에서 주로 발전한 산업은 식품생산, 어류가공 및 일부 기계류 생산 등에 그치고 있으며 완제품도 동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기 보다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

o 러시아 극동지역이 한·중·일 3개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 글로벌 분업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각종 정책을 그 수단으로 활용

- 극동지역이 동북아 생산 분업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산업군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함.

- 기업이 생산체제를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및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제반시설 구축 등 투자 유인이 있어야 함.

- 제품과 원자재 등의 운송과 물류에 적합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여기에 더 이상적으로는 극동지역이 생산된 제품의 소비시장 역할을 하는 것이 좋으나 극동지역의 적은 인구 수 및 산재된 인구분포,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대규모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

- 상기의 주요 과제는 극동지역이 동북아시아 생산 분업체제에 편입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러시아 정부는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산업기반이 없는 러시아에게 빠른 목표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계 기업의 제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임.

2 극동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 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수행과 함의

○ 푸틴 정권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서부지역과 지방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수행

- 1990년대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인 문제가운데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전개가 어려웠다는 점임.
  * 1990년대 사회·경제적 혼란기에 지방정부는 권한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령을 제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중앙-지방간의 정책효율성이 약화

- 푸틴 정권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에 의한 지방정부 수장의 임명, 지방 예산에 대한 감독과 권한 강화 등의 정책도입

- 지방에 대한 푸틴 정부의 정책은 2000년 취임이후인 2001년 10월 연방정부가 채택한 ▲러시아 연방 각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격차축소(2002-2010년 및 2015년까지) 프로그램[6] 과 푸틴 2기의 ▲러시아 연방 각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전략개념[7] 으로 요약

○ '러시아 연방 각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격차축소(2002-2010년 및 2015년까지)' 프로그램은 지역 간 격차 축소에 집중

- 동(同)프로그램은 1990년대 이후 확대되었던 중앙과 지방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축소하여 국가 내 갈등요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함.

---

6)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2-2010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ред. от 22 июня 2006 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1.10.2001 № 717.

7)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표 3 〉 러시아 경제발전 격차축소 프로그램의 예산 배분(2001년)

(단위: %)

주요 분야	사회복지 (빈곤층·장애인 주거시설 건설, 교육, 보건)	사회인프라 (에너지, 수도, 난방, 가스, 교통)	환경보호 및 지역문화 보전	문화, 학문, 생산
비중	45.1	34.8	13.4	6.7

* 자료: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2-2010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 동(同)프로그램의 예산 집행 비중을 보면 지방의 빈곤층이나 장애인 주거시설 건축과 보건, 의료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에 45.1%인 실제로 가장 많은 예산 배분이 이루어 졌음.

- 그 다음으로 에너지, 수도, 난방, 가스, 교통 등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34.8%로 분배되었음.

- 그러나 동(同)프로그램의 한계는 정책적인 고려나 이해관계로 인해 낙후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어[8]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지역의 경제발전에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임.

-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을 집중하거나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

○ 푸틴 2기의 '러시아 연방 각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전략' 프로그램은 격차축소보다는 지역거점화를 통한 중점지역 발전과 파급확대로 전환

- 기존의 정책이 지역 간의 문제에 대한 조정문제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8) 김상원, "러시아의 지역 간 경제격차 문제,"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1, No. 1,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p. 22.

Development)'를 신설하여 지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 또한 기존의 격차축소 프로그램의 미진한 성과와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지방의 균등한 발전보다는 거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새로운 정책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균등화 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同)정책의 수행으로 정책수행의 중심이 균형보다는 개발로 이동되었다고 평가

- 지역개발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지역의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데 있음.

- 동(同)정책은 단기 과제라기보다는 2020년까지 수행계획을 가진 장기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방안을 통한 재정마련과 단계적 발전방안 추진

○ 앞선 푸틴 정부 1·2기의 정책은 극동지역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지역 개발 및 균등화 프로그램과 지역거점화 등의 정책혼선으로 지역격차 해소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9)]

〈 표 4 〉 상·하위 지역별 GRP 격차 변화(2004-2008년)

구분	2004년	2006년	2008년
상위지역(A, USD)	24,074	32,500	38,900
하위지역(B, USD)	3,725	4,360	5,612
GRP격차(A/B, 배)	6.46	7.45	6.93

* 주: 상위지역은 모스크바시, 튜멘, 사할린의 3개 지역을, 하위지역은 9개 하위지역을 의미

- 2004년 기준 GRP 상위지역의 1인당 평균 24,074 달러에서 2006년 32,500 달러, 2008년 38,900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하위지역도 2004년 3,725달러에서 2008년 5,612달러로 증가

9) 김성진, "푸틴 집권기 러시아 지역격차의 변화(2000-2008)," 『중소연구』, 제 35권 제 4호, 2011/2012 겨울, pp. 173-203.

- 그러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지역 간 GRP 격차는 2004년 6.46배에서 2008년 6.93배로 오히려 악화

- 2006년 지역 간 GRP 격차가 7.45배에서 2008년 6.93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원유가격 하락 및 루블화 평가절하로 주요 원유수출지역인 상위지역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다만, 2000년부터 장기간 지속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전반적인 러시아 경기호황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빈곤층은 감소하는 등 사회전반의 후생은 개선

〈 푸틴 1·2기 극동지역 경제상황 개선: 사할린 지역 사례 〉

○ 사할린은 극동지역 중에서도 섬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채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며 러시아에서도 소득수준이 상위권에 포함

- 2000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러시아 평균대비 지역 내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원자재 의존 구조인 사할린의 특성에 기인

* 경기개선에 따라 최저생계비 절반 이하의 빈곤층 가구가 2000년 7.8%에서 2005년 3.7%로 감소

〈 표 〉 2000년 이후 사할린 지역 1인당 총생산과 러시아 평균대비 비중

(단위: 루블)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사할린	61,596	85,927	172,004	321,109	657,783	987,418
러시아 평균	39,532	60,611	97,691	157,233	237,552	261,803
러시아 평균대비 비중(%)	155.8	141.7	176.1	204.2	276.9	377.2

* 자료: Росстат, 2012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 사할린 지역의 경기개선은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푸틴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동(同)지역의 높은 경제성과가 타 지역으로 분배되는 구조를 보임.

□ 극동개발 정부 프로그램

○ 앞선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극동지역에만 특화된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기 시작

- 2010년대 이후 푸틴 3기 정권의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의지가 본격화되면서 지방격차해소나 지방거점발전 중심의 목적보다는 극동지역 자체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 전개

- 2000년대 후반부터 극동 및 바이칼(Baikal)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시작

○ 극동지역 개발계획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상위계획과 하위계획들로 구성되며 구분에 따른 구체적 목표와 전략이 상존

-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 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은 극동 및 바이칼지역 전반에 대한 발전전략으로 향후 해당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최상위 계획

  * 2009년 12월 28일 연방정부령 No. 2094에 의해 발표

- 동(同)전략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 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이 존재

  * 2013년 3월 초안발표, 2014년 4월 개정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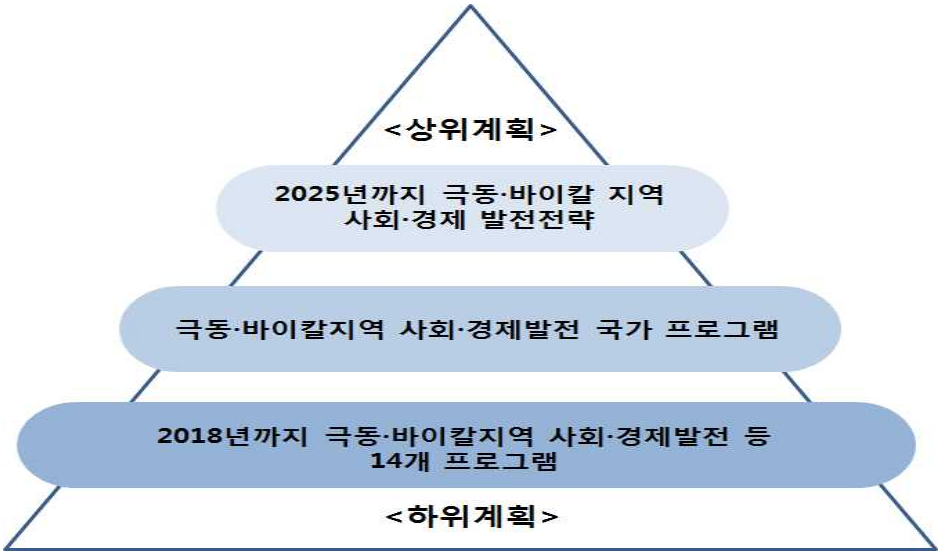
- 상위계획인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은 지역개발에 대한 개념, 과제 등을 포함한 전략적 계획이며 후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실천내용을 담고 있음.

- 마지막으로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하부 프

로그램으로 다음의 2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총 14개의 부속 프로그램이 존재

* 연방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18 года≫)
* 연방목적 프로그램 ≪2007-15년까지 쿠릴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발전≫(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2007-2015 годы≫)

〈 그림 2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 개념



○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 동(同)전략수행의 목표는 ▲지역 내의 경제발전, ▲거주 환경개선, ▲러시아 평균 수준의 사회·경제발전 달성을 통한 극동·바이칼지역 정주인구의 안정화임.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① 지역 내 각 연방주체들의 천연자원, 산업기반, 인적·학문적 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특화를 위한 여건 마련, ② 지역 내 선도적인 경제성장 지역과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정착 시스템 구축, ③ 특수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격, 요금, 관세, 조세, 예산정책의

법적기반 마련으로 지역 내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

* 이 밖에도 ④ 인구 및 노동력 유지와 인적자원 개발, ⑤ 토착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보호 등

- 정부는 2025년까지 전략수행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 추진 목표를 제시

〈 표 5 〉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단계별 수행목표

단 계	목 표
1단계(2009-2015년)	- 러시아 평균 투자성장률 상회 - 에너지·자원절감기술 도입 - 고용률 소폭 증대 등
2단계(2016-2020년)	- 기존 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시행 - 교통 잠재력 확대, 여객·화물 운송 확장, 차량·철도·항공·항구 등 주요 운송 네트워크 완성 - 원자재 가공품 수출비중 확대
3단계(2021-2025년)	- 극동·바이칼 지역의 세계경제 편입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 - 혁신경제발전, 첨단기술·지식경제·에너지·교통 분야에서 극동·바이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제분업 참여 - 대형 에너지·교통운송 프로젝트 완료 등

* 자료: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стр. 9-10.

- 단계적인 주요 수행목표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2021-25년의 3단계 계획에서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각종 산업 및 대형 프로젝트의 완성을 통해 국제 산업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여기서 언급되는 국제가치사슬은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중·일의 산업 가치사슬을 의미하며 극동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해당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

- 동(同)전략은 상위 전략인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음.

- 1단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2,011억 루블과 2,520억 루블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2단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4,665억 루블이 예산으로 책정

〈 표 6 〉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

프로그램의 목표	-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 - 극동지역의 거주 인구와 노동력 확보
목표 수행을 위한 주요 과제	-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개선을 통해 극동지역에서의 선도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강화 - 극동·바이칼 지역 투자유치 프로젝트 현실화 - 극동지역으로의 노동력과 투자 유입확대 - 극동지역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법적 체계 마련 - 극동·바이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통,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 쿠릴제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 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요 과제는 상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계에서의 극동·바이칼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의 확대와 노동력 유입 증가, 인프라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하위 14개 프로젝트』는 상위 발전전략과 국가프로그램을 지역적·세부적으로 수행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

- 하위 14개 프로젝트는 상위의 전략과 국가 프로그램의 주요 시행계획에 대해 대체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수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프로젝트

들로 구성

* 예를 들어,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상위 국가 프로그램에 비해 단기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음.

- 14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2007-2015년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은 해당 기간 동안 쿠릴열도 지역에서의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쿠릴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설립 등이 주요 목표

- 같은 지역에서 이어지는 프로그램인 “2016-2025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이전 단계의 수산업 발전기반을 바탕으로 한 수산업 가공 콤플렉스 건설 등이 주요 목표

□ 북극해 개발 프로그램과 극동지역의 역할

○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의 물류운송 경쟁력을 포함하여 극동지역과 연계한 북극해 개발에 주목하고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북극해 개발을 가속화

- 러시아 정부의 북극해 개발 프로그램은 북극해와 관련한 항만, 철도, 배후도시 개발 등 기반시설 건설이 주요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북극지역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생산 및 운송을 연계하는 종합 프로젝트임.

- 북극항로는 온난화로 인한 해빙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 해상루트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의 수에즈(Suez)운하 대비 경쟁력 보유

*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대비 거리 약 7,000km 또는 운항일수 약 10일 단축가능

〈 표 7 〉 북극해 개발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실행기간	자금 규모 (bln. ruble)	수행기관
북극 위도 철도 건설	2011-2020년	270.8	러시아 연방 교통부
무르만스크 교통센터 복합 개발	2020년	144.96	러시아 연방 교통부

야말반도 항구 도시 기반 건설	2018년	97.2	러시아 연방 교통부, 러시아 연방 북극항로관리기구
야말 액화천연가스 공장건설	1단계: 2017년 4분기 2단계: 2019년 3단계: 2020년	150.0	노바텍社: 50,1%; 프랑스 Total社: 20% 중국 CNPC: 20% Silk Route Fund: 9.9%
벨코무르 철도 건설	2030년 까지	225.0	러시아 연방 교통부, 벨코무르社, Poly Technologies, Inc.
레나강 유역 내륙수로수송을 위한 함대 현대화 및 선박건설, 조선소 재건축 및 현대화	2016-2026년	함대 건설 및 선박현대화:7.9, 조선소 재건축 및 현대화:5.75	LORP社, 사하 공화국 개발공사, 극동개발펀드
북극항로 운항 시스템 구축	2020년	2.89	러시아 연방 교통부
수문 기상학 우주 체계 제작 ('Arctica-M')	2016-2020년	6.26	러시아 연방 우주국 로스코스모스, 러시아 연방 수문기상학 및 환경 방사는 감시 서비스
Rosneft의 대륙붕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확립	조 사 / 측 량 : 2017-2018년 건설: 2018년 최종: 2025년	추후 구체화	Rosneft
항구도시 틱시의 재건축 및 현대화	2017-2020년	36.92	러시아 연방 교통부, Tiksi Seaport

* 자료: 주한 러시아대사관

- 북극항로는 현재로서는 연중 정상운행이 불가능하여 하계 약 4개월간의 운항만이 가능하나 다만,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속되면 2020년에는 약 6개월, 2030년에는 연중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극지역은 원유·천연가스 등 세계 미탐사 자원의 상당부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극동지역은 북극지역 탐사를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 가능

- 북극해에는 전체 미발견 원유의 약 13%, 천연가스의 약 30% 가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기타 희귀광물 부존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극해 지역에서 5개 연안국(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의 자원탐사·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북극해 개발에서 전략적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하는 전진기지 기능

□ **극동지역 개발 정부 프로그램의 시사점**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들은 동(同) 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개발 정책과 개발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장기적인 전략계획에 따라 중·단기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정부 개발방향의 일관성이 보장

- 하지만, 2014-2015년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감소로 인해 정책집행의 실효성과 추동력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

○ 2010년대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과거의 단편적인 지역격차 해소 등의 목적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극동지역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과 '추격(catch-up)'전략을 드러내고 있음.

- 대부분의 개발 계획이 사회기반 개발, 제조업 투자 유치와 같은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단기적인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 국가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권 지속과 통제유지

3 극동발전의 전략적 제도와 도구

□ 극동개발을 위한 주요 제도 및 도구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개발활동의 촉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기구 등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실현에 활용

- 정부의 제도적 마련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경제특구,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사업수행을 위한 기구(극동개발공사),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기구(극동개발펀드, 러·중 농업펀드) 등으로 구분 가능

- 정부는 상기 제도이외에 극동지역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홍보수단으로 APEC 회담(2012년), 동방경제포럼을 개최

- 정부는 2010년대 들어 극동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극동개발정책을 본격화하였고 극동개발부가 정책수행의 구심점역할

  * 이전까지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수행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에 혼선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에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들은 현재 러시아 경제가 정부 주도하의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형태의 기능적 요인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주요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 여전히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형태의 모습을 유지

- 극동지역 개발이 러시아의 최우선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역량과 재원을 집중시켜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의지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 국가자본주의의 실현에 있어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례는 다양한 도구 활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극동지역에서『APEC 회담 및 동방경제포럼』개최의 의미 〉

○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국제위상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인지도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전략은 201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소치(Sochi) 동계올림픽 개최와 2018년 개최예정인 월드컵 경기와 같은 국제경기 개최가 그 예임.

- 이러한 국제경기는 개최지의 국제인지도를 향상시켜, 국가이미지 개선과 투자유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부각

○ 러시아 정부는 세제 특혜를 통해 극동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PEC 정상회담과 동방경제포럼 등의 국제회의를 활용

- 2012년 있었던 APEC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는데 동(同)회담의 개최를 통해 극동지역의 국제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 APEC 정상회담과 달리 동방경제포럼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간 단위의 행사로서 행사자체의 인지도는 전자에 비해 떨어지나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이슈화 지속

□ 선도 사회·경제 개발구역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0월 극동지역에 선도 사회·경제 개발구역의 설립에 관한 법안 심의 및 2015년 3월 연방법 발효

-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극동지역에서의 '선도 사회·경제 개발구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서명

- 푸틴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따라, 2015년 3월 극동지역에서 선도 사회·경제 개발구역(이하 선도개발구역) 설립에 대한 연방법이 발효

○ 선도개발구역은 지정된 지역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등의 특혜요인이 있음.

- 법인세 중 연방세는 첫 5년간 0%, 지방세는 첫 5년간 5%이며 이후 5년간 10%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는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5%를 적용하며 토지세도 첫 5년간 0% 적용

- 사회보장세는 일반세율의 경우 34%이나 선도개발구역의 사회보장세는 7.6%로 많은 세재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동(同)지역으로 수입되는 부품·기계류 등에 대한 면세혜택이 있음.

○ 선도개발구역의 행정 간소화 절차는 동 구역에 대한 투자유입 확대에 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에 특혜를 주기위한 조처로 마련

- 극동지역의 만성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인력부족과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역 내 외국인 인력의 채용과 거주에 외국인 인력쿼터제의 제한 미적용과 절차 간소화

  * 특히, 외국인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

-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 감독 또는 행정지도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최소화

  * 조사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조사기간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두어 기존 러시아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불편함 종식

- 그 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의사의 진료와 국제학교 설립이 선도개발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제반 생활여건에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법률적 기반 도입

○ 선도개발구역은 2017년 1월말 기준 총 15개의 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투자 추이에 따라 향후 지정을 확대할 예정에 있음.[10)]

- 전체 15개중 9개의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중 지정되었으며 6개 구역은 2016년 중 지정되었음.

- 극동지역 중에서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3개씩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할린과 사하공화국이 각각 2개, 추코트와 캄차카 지역이 각 1개씩 지정

- 하바로프스크 지역은 극동지역에서 비교적 공업이 발전한 곳으로 이 가운데 하바로프스크 선도개발구역은 석유화학, 식품가공 및 건설 자재 등의 다양한 산업생산 시설 투자유치가 기대되는 곳임.

  * 싱가포르 기업인 Baoli Bitumina Singapore는 동 지역에 약 2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여 정유시설 중심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협의 중

- 사할린에 지정된 두 개의 선도개발구역은 동일한 영역으로 사할린의 주요 도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아니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는 사할린 섬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리조트 및 휴양 시설이 있어 관광지로서의 기능확대가 기대되는 곳임.

- 현지 지정된 곳 이외에 추가로 지정이 유력한 곳은 연해주 지역의 루스끼 섬으로 동(同)지역은 관광, 의료, MICE 사업 등 다양한 산업발전이 추진되고 있음.

10) 극동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극동개발부는 현재 지정된 15개의 선도개발구역을 2025년까지 21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임.

〈 표 8 〉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지정현황

연방	선도경제구역 명	지정일	면적(ha)	주요 사업
사하공화국	캉갈라시	2015.8.21	16.91	- 석유화학
	남 야쿠티아	2016.10.	-	- 광공업 - 물류
추코트 자치구	베링고프스키	2015.8.21	15,900,000	- 광물생산 - 대체에너지
캄차카	캄차카	2015.8.28	1,000,000	- 관광·레저 - 산업생산
하바로프스크	하바로프스크	2015.6.25	14,689.3	- 산업생산 - 철강야금
	콤소몰스크	2015.6.25	8,247,000	- 목재·철강 가공 - 식품가공
	니콜라예프스크	2016.10.	-	- 제조업
사할린	유즈나야	2016.3.17	19,438.9	- 농업
	고르니-보즈두흐	2016.3.17	19,438.9	- 관광·레저
아무르	벨로고르스크	2015.8.21	30,000	- 농업 - 식품가공
	쁘리아무르스카야	2015.8.21	10,000	- 물류 - 산업생산
	아무로-킹간스카야	2016.8.27	23,400	- 광물생산 - 소비재, 식음료 가공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2015.8.21	171,732	- 물류 - 산업생산
	나제진스카야	2015.6.25.	3,759.2	- 물류 - 산업생산
	발쇼이 카멘	2016.1.28	1,232	- 산업생산

* 자료: 극동개발공사(JSC Far Eastern Development Corporation) 홈페이지 및 각종자료

〈 선도개발구역 개발사례『사할린 섬 '고르니 보즈두흐'』[11]〉

○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의 여러 지방 중에서도 천연가스 채굴비중이 높은 원자재 의존 지역으로 지역 산업의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이 주요과제

- 사할린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수 개의 광구가 존재하며 원자재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반이 유지되는 전형적인 자원의존적인 구조

- 주정부와 극동개발부는 지역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중의 하나가 소련시대부터 스키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르니 보즈두흐(Горный воздух)'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종합개발사업임.

○ 수요 측면에서 고르니 보즈두흐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음.

- 동북아 지역은 2010-2030년 연간 관광객 증가율 평균 4.9%에 이르는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2%의 여행객 점유율이 기대되는 지역

〈 표 〉 동북아 지역으로의 유입 관광객 수: 1995-2030년

	유입 관광객 수(백만 명)				연평균 성장률(%)		비중(%)	
연도	1995	2000	2020	2030	1995-2010	2010-2030	2010	2030
동북아지역	41.3	111.5	195	293	6.8	4.9	11.9	16.2

* 자료: UNWTO Tourism Towards 2030: International tourism by region of destination

-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지역 여행수요 흡수 가능성이 크고 사할린 지역에 대한 관광객 수요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성장요인

11) Ji Won Park, "Suggestion for Cre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Sakhalin region," 2014 Knowledge Sharing Program Ⅱ with Russia: Improvement of Sakhalin Region's Investment Environment, pp. 65-109.

○ 다만, 스키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휴양·레크레이션 시설은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 공급이 포화상태에 있어 다양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복합시설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

* 사할린 지역의 인구수가 60만명에 불과해 내수만으로는 고르니 보즈두흐 스키리조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동북아지역의 경쟁관계에 대한 고려 필요

- 일본의 경우 스키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겨울스포츠 콤플렉스가 온천, 쇼핑, 놀이공원 등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결합한 4계절 복합 콤플렉스로 변신하는 사례가 많음.

- 한국의 경우에도, 동계스포츠 인구수의 감소로 스키리조트가 복합시설화 되고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고르니 보즈두흐의 경쟁가속

〈 표 〉 고르니 보즈두흐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연계된 자연환경의 우수성 도시와 인접하여 접근성 우수	리조트 규모가 작고 인프라개발이 더딤 내수 시장이 작음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동북아지역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내 수요 지속 상대적으로 지명도 낮아 성장 가능성이 큼	동북아 스키리조트의 대형화 동계스포츠에 대한 해외 수요 감소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업 리스크 상존

○ 선도개발구역 지정을 통한 고르니 보즈두흐의 개발 전략은 단기적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시설의 현대화와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 리조트와의 차별화로 모객 확대

- 단기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단계에서의 외국인 투자확대와 국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개발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관광요인의 '증식적 확장' 필요

○ 선도개발구역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3단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기대되는 기능에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핵심은 1영역임.

- 1영역은 선도개발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실제로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및 공업지역의 기반이 조성

〈 그림 3 〉 선도개발구역의 발전영역

발전 영역	주요 특징
1영역(중심부)	- 영역은 중심에서 수십~수백 헥타아르(ha)까지 - 수출중심의 생산지역, 공업지대, 자유무역지대
2영역(환경부)	- 영역은 중심을 포함하는 수만 킬로미터(㎢) 까지 - 중심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술적 인프라 지역
3영역(에코 시스템)	- 새로운 거주자와 투자를 흡수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춘 영역이자 도시·행정 구역으로 중심부와 환경부를 에워싸는 지역

*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부 발표자료

- 2영역은 선도개발구역에서 주변부 역할을 하는 영역으로 핵심지역인 1영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기술적 인프라 역할을 수행

  * 2영역의 개념은 사실상 러시아 정부가 신경제특구 개발 당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했던 '클러스터(cluster)' 전략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유사산업의 물리적 집

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임.

- 3영역은 중심부와 환경부를 둘러싼 도심지역으로 중심부와 환경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일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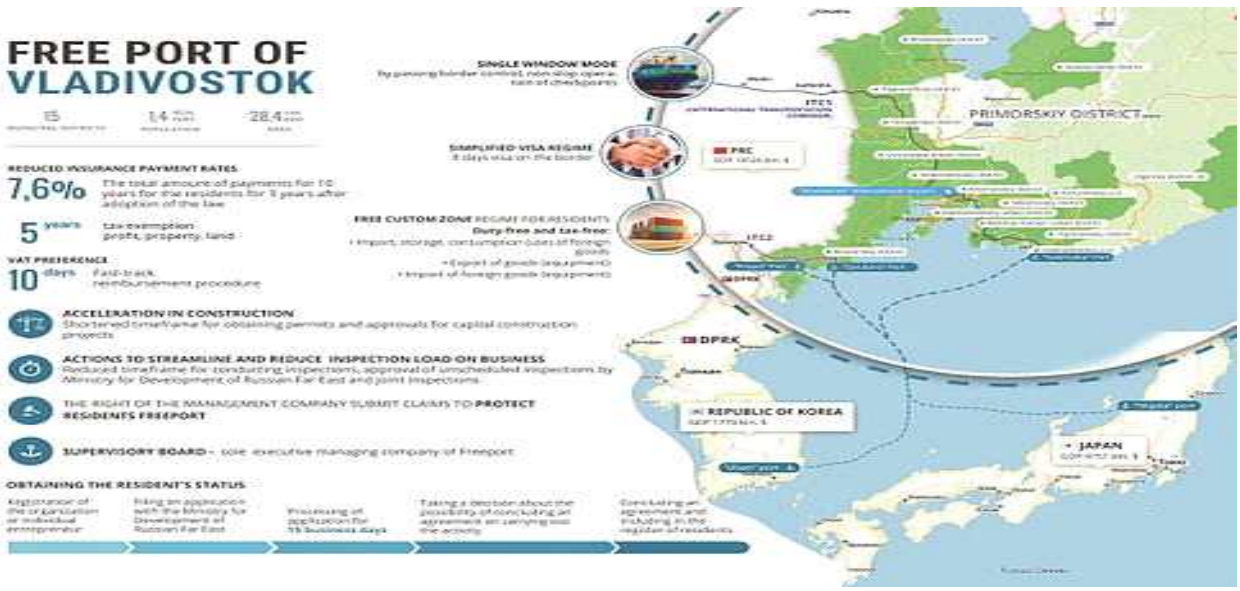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Free Port of Vladivostok)

○ 푸틴 대통령이 의회 연두교서를 통해 자유항 지정에 대해 언급한 이후 전격적인 법률제정 절차를 통해 자유항 지정

-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연례 의회 연두교서에서 극동 지역의 신속한 경제개발 계획 이행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을 자유항으로 지정해야 함을 언급

- 이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에 대한 법안이 2015년 7월 제정되면서 블라디보스톡 인근 16개 지역에 대한 자유항 공표

〈 그림 4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현황



○ 자유항은 연해주 지방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특혜제공을 통한 투자촉진이 주요 과제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항의 의미는 항구에서의 수출입 등 물동량

에 대한 세관검사 면제 등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우대조치 설정목적

* 자유항은 관광, 소매, 주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대해 폭넓은 특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을 뜻하며 통합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임.[12)]

- 투자자에 대한 감세 등의 투자우대조치를 시행하여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

o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세제우대 조치는 기본적으로 선도개발구역(TOR)의 혜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선도개발구역의 우대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중 연방세는 첫 5년간 0%, 지방세는 첫 5년간은 5%, 이후 5년간 10%의 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동일한 혜택제공

- 재산세는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0.5%를 적용하며 토지세도 첫 5년간 0% 적용

* 일반세율의 법인세(연방+지방)는 20%, 재산세는 2.2%, 토지세는 1.5%의 세율을 적용함.

- 사회보장세는 일반세율의 경우 34%이나 자유항의 사회보장세는 7.6%로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자유항으로 수입되는 부품·기계류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제공

- 세제혜택 이외에도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있는데, ▲신속한 건축허가, ▲수출업자의 경우 신속한 부가가치환급조처,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철폐,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제공 등

12) The World Bank,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April, 2008, p. 11.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차이점은? 〉

-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제도 중 대표적인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제도의 경우 사실상 주요 정책인 세금감면혜택이 동일하여 투자자입장에서는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음.

- 두 제도가 적용하고 있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인프라 제공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입주 희망지역의 인프라와 주변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선도개발구역의 경우, 극동지역 내의 일정 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구역에서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사무실 등의 입주시설이 좀 더 기업 친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업종에 따라 유사 산업이 한 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업종간의 클러스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선도개발구역은 주요 소비지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많고, 주변 여건에 따라,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와의 연계여부 고려필요

- 반면 자유항은 극동지역의 상당지역이 포함되어 블라디보스톡 시내 등 어떤 곳이든 기업의 선호에 맞는 곳에 입주가 가능하여 주요 소비지역 인근에 생산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점임.

- 자유항의 단점은 선도개발구역과는 달리 입주시설에 별도로 제공되는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투자 현황과 평가

○ 선도개발구역은 선정이후 아직까지 기한이 오래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효과를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입주기업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 상황

-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이 2015년 중 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현 시점에서 제도적 성패를 논하기는 이름.

- 다만, 극동개발공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 기업의 수, 구역 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투자금액 등의 측면에서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 입주기업의 수는 전체 선도개발구역에서 2016년 기준 169개에서 2017년 268개, 2020년에는 484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수에서도 각각 28,000개, 34,800개, 48,8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투자금액의 경우, 2016년에는 4,980억 루블이 투자되었고, 2017년과 2020년까지 각각 5,557억 루블과 6,429억 루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림 5 〉 선도개발구역 입주자, 일자리, 투자금액 현황

* 자료: 극동개발공사(JSC Far Eastern Development Corporation) 홈페이지

○ 자유항의 경우도 선도개발구역과 마찬가지로, 특혜지역 지정이 오래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의 투자성과를 기준으로 성패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역시 꾸준한 기업입주 및 투자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자유항에 입주한 기업 수는 2016년 100개에서, 2017년 150개, 2020년까지는 약 420개에 이를 것으로 기대

〈 그림 6 〉 자유항 입주자, 일자리, 투자금액 현황

* 자료: 극동개발공사(JSC Far Eastern Development Corporation) 홈페이지

- 자유항에 대한 투자금액이 2016년 1,400억 루블, 2017년 2,100억 루블, 2020년에는 3,000억 루블로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수 역시 각각 18,500개, 20,500개, 23,000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개발 관련 극동개발부 관계자들은 동(同)제도의 특혜가 동북아지역의 타 경제특구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서 보완할 점이 있음을 인정[13)]

- 러시아 극동개발부 관계자들이 지적한 보완점으로는 ▲동(同)지역에 대한 단위별 투자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과 ▲투자국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임.

- 2016년 9월말 기준, 투자확정 프로젝트의 약 30%가량이 1백만 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고 대체로 50~850만 달러에 머물고 있어 러시아 정부가

13) 『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개발 정책방향" 및 "자유항 개발 정책방향" 세미나, 2016.9.28. 국토연구원.

기대하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투자비중 높음.

* 투자규모가 작을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작은 단점이 상존

- 투자 기업 중에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한국 등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러시아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동북아 다양한 국가들의 투자유입 분산효과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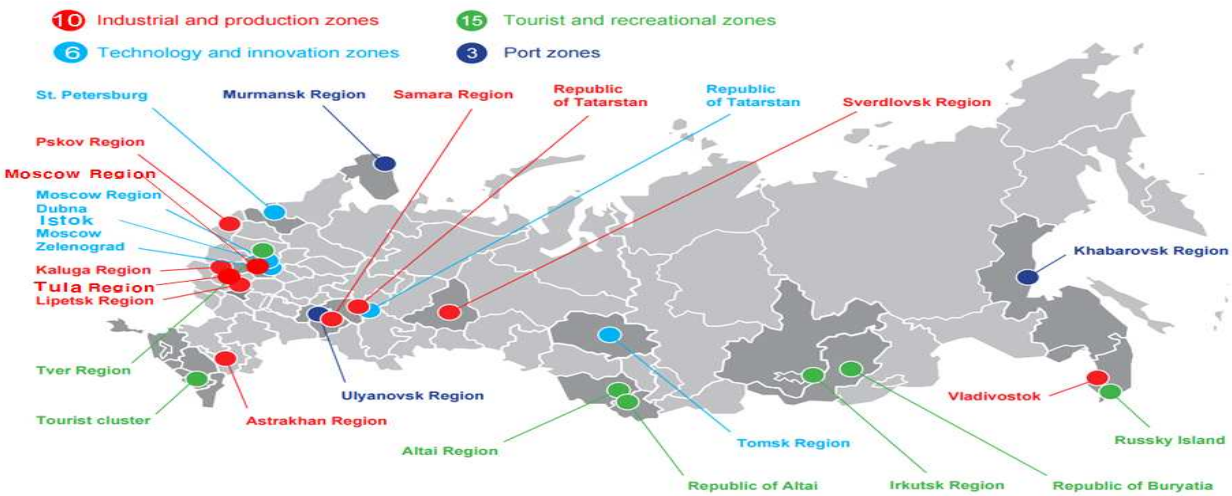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으로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과 더불어 투자유입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함.

-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특구관련 법안인 '러시아연방 경제특구에 대한 법률(Law on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Russian Federation)'을 도입하면서 특구제도를 정비하였으나 극동지역은 지정 미진

* 정부가 규정하는 특구유형은 산업, 기술&혁신, 관광, 물류 등 총 4개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맞는 투자유치 추진

〈 그림 7 〉 러시아 경제특구 지정현황



* 주: 극동의 루스키 섬과 하바롭스크는 2016년 지정 해제

* 자료: 러시아 경제특구청 홈페이지

- 경제특구는 러시아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한 제도이나 극동지역에서의 지정은 다른 지역보다 늦었고 선도개발구역이나 자유항제도의 이슈성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함.

- 그러나 선도개발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최근 극동지역의 경제특구를 정비하면서 투자유입을 위한 효율화 노력 지속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의 운영은 극동개발부가 전담하지만, 경제특구는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부는 경제특구의 자체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방안을 추진 중

o 극동지역에 지정된 경제특구는 현재 총 1개로 블라디보스톡 산업특구이며 루스키 섬 관광특구, 그리고 하바로프스크 물류 특구는 2016년 폐지

-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 운영으로 선도개발구역과 차별화되는 정부주도 개발정책의 기조를 유지

〈 표 9 〉 극동지역 경제특구

특구명		주요 추진내용
블라디보스톡 산업특구		- 산업특구로 일본산 마즈다(Mazda), 도요타(Toyota) 등 자동차 조립 중심
폐지	루스키 섬 관광특구	- 연해주의 루스키 섬을 복합관광중심지로 특화
	하바로프스크 물류특구	- 하바로프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정박지, 터미널, 음식료 가공 산업 등을 연계

* 자료: 각종 자료 종합

- 블라디보스톡 산업특구는 2014년 9월에 출범하였으며 주로 일본산 자동차 및 일부 한국산 자동차의 조립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서남부 지역 경제특구의 자동차 생산라인과 같은 모델 구축

* 일본 자동차 메이커 중 마즈다(Mazda), 도요타(Toyota), 한국 메이커로는 현대와 쌍용차 등이 본 특구에서 자동차 조립 및 공급

- 루스키 섬 관광특구는 한국의 제주도 관광특구 육성경험과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여 루스키 섬을 극동지역의 대표적인 관광·휴양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며 쇼핑, 레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를 지향했으나 현재는 선도개발구역으로 전환 추진

- 하바로프스크 물류특구는 하바로프스크의 '사벳스카야 가반(Советская Габань)' 지역에 위치한 물류특구로 항구와 컨테이너 터미널로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투자부진으로 폐지

o 경제특구는 통관특혜 및 세제감면 중심의 혜택을 제공하여 특구입주 초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구 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장비류 등의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특구로의 상품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연방정부귀속 법인세를 5년간 0%로 하고 지방정부귀속 법인세를 입주연도별로 0~13.5%까지로 제한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세제부담을 경감

* 그 밖에 재산세와 토지세도 각각 10년, 5년까지 0%로 제한

o 극동지역에서 경제특구는 유사한 특혜제도를 갖춘 선도개발구역·자유항 등으로 인해 발전의 한계를 노정

- 경제특구는 러시아 연방정부 관할 제도로서 극동개발부가 관할하는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과 제도 운영의 컨셉과 특혜 등이 매우 유사하여 특구가 위치한 지역적 특색이외에 선도개발구역과 차별화 포인트 부재

- 극동지역에서 경제특구의 기능을 선도개발구역이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며 결국 경제특구의 역할 축소

- 향후 극동지역 경제특구의 기능은 선도개발구역으로 이전될 것인데, 이

는 현재 러시아 경제특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구 기능과 권한의 개별 특구로의 이전과 연계되면서 극동지역 특구의 기능은 극동개발공사가 갖게될 것이기 때문

* 경제특구청 본사기능의 이전은 2017년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경제특구와 특구청의 전략모델: 관계자 면담 〉

- 러시아 연방 경제특구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경제특구청 관계자들은 외국인 기업과 투자 유치에서 선도개발구역을 사실상 경쟁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음.

- 따라서, 경제특구청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선도개발구역과의 비교우위 요인이 어떤 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고려와 함께 향후 경제특구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

-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각 지방 경제특구의 운영권한이 2017년 말까지 모두 지방으로 인수되게 되면 연방경제특구청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구청 본사의 모델로는 ▲개별 투자프로젝트 조정자로서의 역할, ▲투자전략기능 강화, ▲정책조정과 운영표준화 집중 등임.

- 극동지역의 경제특구는 선도경제구역 지정보다 그 숫자가 현저히 적고, 지정 일정이 늦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현재 특구 지정은 블라디보스톡 한 곳에 그치고 있으며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수의 선도개발구역 지정에 비해 제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극동개발공사(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во Востока)

○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부 운영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

립된 기업

- 2015년 4월 30일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극동지역에서 선도개발구역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자유항 운영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되었음.

- 공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며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가 단독 주주의 형태로 운영함.

○ 극동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는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여 많은 기업이 극동지역에 투자하고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임.

- 극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여건의 개선 추진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기대

- 선도개발구역의 지정, 운영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선과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 대한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의 유치

- 극동지역에서의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export-oriented economy) 발전과 수입대체(import-substitution) 산업체제 구축

*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대한 투자우호적인 이미지 조성과 홍보활동

□ 극동개발 펀드(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재원 역할을 하기 위해 국고를 기반으로 조성된 펀드

- 극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주요 인프라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돕고 이를 통해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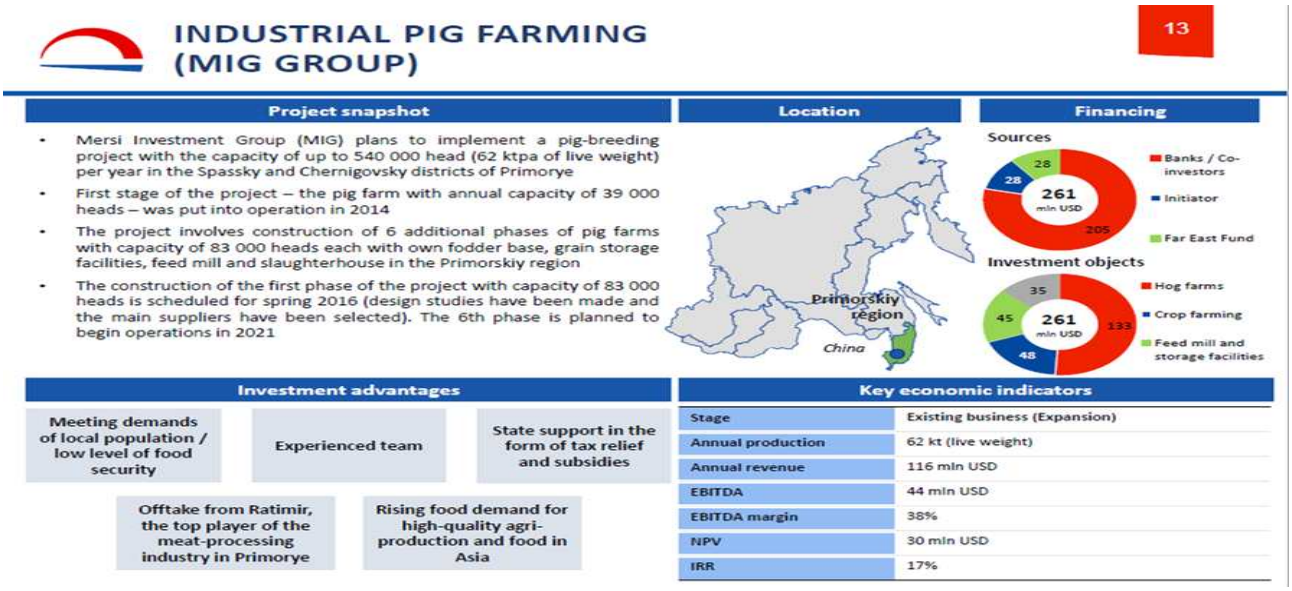
- 러시아 국영은행인 '대외경제은행(Внешэкономбанк)'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조성하였으며 총 자산은 약 11억 달러에 달함.[14)]

○ 극동개발펀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투자를 진행

- 사업단위 프로젝트별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개별 프로젝트 당 평균 약 2천만 달러의 금액을 투자

*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은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그림 8 〉 극동개발펀드 투자사례: 돼지 사육농장



* 자료: 극동개발 펀드 발표자료

- 투자대상은 극동·바이칼 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제조업 기반의 설비·공장 건설 등의 프로젝트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성장성을 위주로 선정하며 최소 이자는 루블화 기준 연간 5%, 상환기간은 7-10년 적용

□ 러·중 농업펀드

14) Far East Development Fund, "Far East and Baikal Region Development Fund: Presentation for Partners and Investors," March, 2016.

○ 최근 정치·외교·경제·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 펀드는 농업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극동개발 목적

- 지난 2015년 5월, 양국은 약 20억 달러의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농지개발, 농업관련 프로젝트 수행, 농업 기업 인수 등의 다양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同)펀드를 구성하기로 합의

- 양국은 동(同)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지역을 극동지역에 국한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농지개발 및 농산물 가공 공장 설립 등이 가능한 지역으로 극동지역이 우선투자 대상이 됨.

  * 러시아-중국 양국은 러시아의 주요 농업지대인 아무르(Amur)지역과 중국의 헤이룽장(Heilongjang)성의 중간 지역에 농업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지역을 구성하기로 합의

○ 동(同)펀드의 투자주체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Рус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와 '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로 공동의 사업자금 펀딩과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며 양국 정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된 펀드

  * 러·중 농업펀드는 농업이라는 특정산업 투자에 국한된 특수목적펀드로 펀드기금 구성과 운용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집행

- 러시아의 투자 주체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로 러시아 정부의 비(非)자원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임.

- 중국은 '중국투자공사'가 투자 주체로 중국 정부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기금을 운용·투자하는 정부공사임.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농업개발을 통해 생산된 작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중국은 미국 등에 의존적인 농산물 수입선을 선회하여 식량수입 다변화 가능

  * 중국 정부는 식량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농장개발, 농산물 관련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Ⅲ 주요국 협력현황과 평가

1 중국의 극동정책과 협력현황

□ 중국의 극동개발 정책과 주요 협력분야

○ 2015년 9월 중·러 양해 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국은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 사업들과 거시경제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극동지역 개발의 컨트롤 타워로 부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동북 3성(헤이룽장성, 길림성, 랴오닝성), 그리고 네이멍구 자치구 지방정부 간의 보다 효과적인 업무 협조가 가능

- 동(同)위원회는 산하에 동북진흥을 전담하는 동북진흥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협력에서 보다 원활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중국은 극동지역 개발 초기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위주의 협력을 전개했으나 점차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로 확대

-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은 극동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으며 ESPO 송유관을 통한 에너지 수입 등이 주요 사례임.

- 그러나 극동지역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해졌고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 제조업, 어업, 인프라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협력에는 중·러 양국 간의 공동펀드 마련을 통한 재원확보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

□ 중국 참여 주요 극동지역 물류·운송 프로젝트

○ 중국 정부는 프리모리예 1(Primoriye 1)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동북 3성의 물류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프리모리예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해주 지방과 중국의 동북 3성을 연결하는 국제 운송회랑 프로젝트로 바다를 통한 대외출구가 없는 중국 동북 3성의 물류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결과를 기대

- 프리모리예 1 노선은 『하얼빈 → 수이펀허 → 그로데코보 → 블라디보스톡 / 나호트카 / 보스토치니』로 연결되는 운송루트 개설 추진

- 하얼빈은 헤이룽장성의 성도(城都)로 인구 약 1,000만 명을 상회하며 중국에서 10번째로 큰 공업도시로 섬유, 식료품, 자동차, 건축재료와 같은 산업이 발달하여 노선개통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그림 9 〉 프리모리예 1(좌), 2(우) 노선

* 주 : 좌측의 그림은 프리모리예 1 노선으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된 이후 중국남부지방까지 연결되는 루트를 보여주고 있음.
*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극동 러-중국 간 협력강화로 탄력받는 Primoriye 1-2 프로젝트

- 동(同)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2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완공이후에는 연간 약 8,00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추정

-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러시아측은 연결루트 마지막 단계인 3개 항구인 블라디보스톡-나호트카-보스토치니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건설 중이며 각 항구의 항만부대시설 확장 공사가 필요한 실정

o 프리모리예 2 프로젝트는 중국의 장춘, 길림, 훈춘을 극동항구와 연결하는 루트로 동북아 물류활성화에 중요 역할 기대

- 프리모리예 2 노선은 『장춘 → 길림 → 훈춘 → 끄라스키노 → 포시에트 /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루트로 추진되고 있으며 프리모리예 1과 마찬가지로 2025년 완공 예정

- 중국의 장춘, 길림, 훈춘 시는 총 인구 수를 합칠 경우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밀집 도시들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한 해상 운송루트가 열릴 경우 효과가 큰 대도시

- 프리모리예 2 노선이 연결되는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구는 러시아의 '숨마(Summa)' 그룹이 중심이 되어 항구현대화가 추진 중인 곳으로 합작투자처인 중국 측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현재는 지연 중

  * 자루비노 항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연계 개발계획으로는 ▲훈춘-자루비노간 철도망 및 도로 개선, ▲훈춘 내륙항 건설, ▲2,300만톤 규모의 곡물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터미널 건설 등이 포함되는 대형 프로젝트

- 프리모리예 1·2의 건설이 완공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물류 운송루트와 체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보스토치니와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루트가 다양한 항구로 분산되고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임.

- 또한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에 추진 중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지대와 연계되어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는 등 중국과 극동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극동지역에서 중국과의 주요 협력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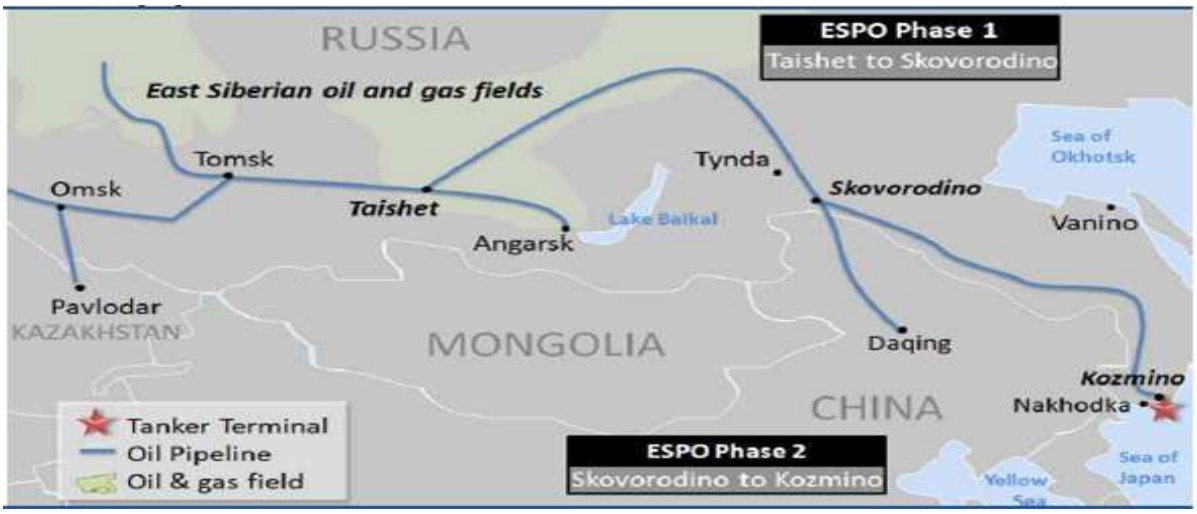
○ 극동지역에서 양국 간 최초의 대형 에너지 개발 사업은 '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운송라인(ESPO)'으로 현재는 러시아산 원유의 대(對)중국 수출 주요루트로 자리 잡았음.

- 러시아와 중국은 2003년 5월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했으며 2006년 4월 첫 공사를 시작으로 중국-러시아간 파이프라인은 2010년 완공되어 2011년 1월부터 중국에 원유공급 시작

- ESPO 1단계 라인은 시베리아의 타이쉣(Taishet)에서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까지 연결되며 이곳에서 중국의 다칭(Daqing)까지 연결

* 다칭은 중국의 주요 원유생산지역이나 노후화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유전으로 다칭의 인프라 기반으로 중국 내 원유운송 원활화 가능

〈 그림 10 〉 ESPO 파이프라인



* 자료: Platts, J.P.Morgan Commodities Research

- 중국은 ESPO 송유관을 통해 2015년에 1,600만 톤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누적 수입량 7,799만 톤을 기록했으며, 2015년 기준 러시아는 중국의 제1 원유 수입국

o ESPO 원유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중국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 양국은 천연가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14년 5월 러시아 국영가스기업인 가즈프롬(Gazprom)과 중국의 중국석유공사(CNPC)는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는 극동지역으로부터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은 해마다 증가하여 연간 380억 입방 미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양국은 추가로 중국 서부 지역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알타이 가스관 건설도 논의 중

- 중국은 국내 화력 발전소들과 전력 공급업자들의 해외 저가 석탄 선호로 인하여 러시아산 석탄도 수입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539만 톤, 2015년에는 1,578만 톤의 러시아 석탄을 도입

o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의 곡물수요가 확대되면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분야 협력 강화

  * 2014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6위의 곡물생산국가로 에너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곡물을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보완적 관계에서의 협력이 유망

- 러시아와 중국은 2006년부터 곡물 수출에 대한 협상을 해왔으며 10년만인 2015년 12월 양국의 합의에 의해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산 곡물의 중국 수출이 허용

- 중국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식용, 가축 사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옥수수 6,942만 톤, 대두 3억 2,607만 톤을 수입

- 주요 수출품인 밀은 알타이와 크라스노 야르스크주, 노보시비르스크 및 옴스크 주에서 수출되며 옥수수, 쌀, 콩, 캐놀라 등은 하바롭스크, 프리모리예, 자바이칼 주, 아무르 주 및 유대인 자치구 등에서 공급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지역에 대한 중국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극동지역 경제협력에서 새로운 분야로 확장

-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에 투자한 기업 중 러시아 기업을 제외하고 중국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벨로고르스크 선도개발구역(아무르 주)에 클링커(clinker) 공장을 연데 이어 향후 정유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캉갈라시(사하 공화국), 나제진스카야(프리모리예)에도 투자 사업을 추진 중

-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사업이 과거 자원개발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제조업 투자를 통한 산업협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 다만,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극동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스크바 등 중앙연방관구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은 투자 확대 중

□ 중국의 대(對)극동정책의 의미

○ 최근 중국은 극동 지역의 자원 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양국 정부 간 대화 채널 강화, 교통 인프라와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

- 중국은 러시아와의 다양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협력 분야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중국의 대(對)극동 경제협력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철저하게 부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개발, ▲농업분야 협력, ▲인프라 개발, ▲제조업 투자 등이 그와 같은 사례

- 중국은 극동지역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저하는 사이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 다만, 극동지역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와 인구유입은 러시아로 하여금 경계심을 확대하도록 할 수 있어 중국은 당분간 경제협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

○ 최근 러시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중국을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2005년 34%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나 연도별로 긍정평가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2017년에는 50%에 이름.

- 다만, 우호적 관계·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는 2014년 36%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다시 27%로 하락하여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하긴 하나 동맹관계로 보는 시각은 최근 약화

-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경제적·정치적 라이벌 및 경쟁자, 적대적 관계로 보는 시각도 2014년에 비해 확대되어 각각 2014년 대비 2017년에 10%와 5%를 기록

〈 표 10 〉 러시아는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2005년	2007년	2009년	2014년	2017년
전략적·경제적 파트너	34	36	41	49	50
우호적 관계·동맹	22	27	19	36	27
경제적·정치적 라이벌 경쟁자	24	21	24	8	10
적대적 관계·잠재적 라이벌	4	4	4	1	5
모름	16	12	12	6	8

* 자료: Vciom, Russia-China-USA: Strategic Triangle Relations, Press release no. 1925

- 〈표 10〉의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현재 인식은 러시아인들이 중국을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나 라이벌로 생각하는 성향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표 11 〉 21세기에 중국은 러시아의 친구가 될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

	2005년	2007년	2009년	2014년	2017년
우호적 관계·동맹	22	28	20	43	37
가까운 파트너	26	24	27	36	38
위험한 이웃·경쟁자	25	20	24	9	14
라이벌·적	6	4	5	1	2
모름	21	24	24	11	9

* 자료: Vciom, Russia-China-USA: Strategic Triangle Relations, Press release no. 1925

- 〈표 11〉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우호적 관계·동맹 이라고 대답한 비중은 2014년 43%에서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유

- 또한 가까운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대답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38%에 이를 정도로 긍정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75%에 이름.

- 반면, 위험한 이웃·경쟁자 및 라이벌로 평가하는 비중은 16%에 그쳐 미래의 양국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약함.

○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지난 10년간 라이벌·경쟁자에서 파트너이자 동반자적 관계로 변해왔으며 이는 극동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강화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 극동지역 진출에서 중국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중국진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었으나 최근의 경제적 협력강화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음.

- 지난 10여 년간의 꾸준한 협력강화는 러시아 여론으로 하여금 중국이 믿을만한 경제적 파트너라는 점을 각인시켜주고 있음.
  * 다만, 러시아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개선 여론이 러시아 정부 지도층의 정책입안에 얼마나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며 양국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필요에 따른 우호와 반목의 관계를 거듭해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극동지역 개발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중대과제 실현에서 중국은 이미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되었으며 러시아인들의 인식개선은 극동지역 경제협력에 긍정적 요인

o 한국의 대(對)극동 전략에 있어 중국의 사례는 정부 컨트롤 타워의 단일화 및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극동지역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국정부의 소통채널 일원화는 중국의 대(對)러시아 정책목표와 협력 사안을 명확하게 하며 러시아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 극동개발에서 중국과 같이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은 어려우나 일종의 '극동사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 간 폭넓은 정책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현재 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유라시아 진출협의회'는 지역 범위가 유라시아로 지나치게 넓고, 프로젝트 발굴을 기반으로 한 기업관련 논의가 대부분으로 극동지역 현안 논의와는 거리가 있음.

- 중국은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협력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협력전략을 구사함으로 러시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음.
  * 물론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러시아 측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인 사안을 통한 실용적인 접근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한국은 극동 경제협력에서 정부차원의 협력채널을 일원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시현으로 G2G 차원의 실용적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2 일본의 극동정책과 협력현황

□ 일본의 대(對)극동 협력현황

○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협력은 주로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할린을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에 일본상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 일본의 극동 투자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할린 가스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사할린Ⅱ는 2009년부터 LNG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 생산량의 80%를 일본으로 수출

  * 1994년 4월 미쓰이, 미쓰비시, 로열더치셸은 사할린 동북지역의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 사할린에너지(Sakhalin Energy)를 설립하고 탐사착수

- 일본의 사할린석유가스개발(Sakhalin Oil and Gas Development. Co.)은 엑손모빌(ExxonMobile), 로스네프트(Rosneft), 인도 석유천연가스기업(ONGC)과 함께 사할린Ⅰ 사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만 배럴(日) 생산 중

- 2011년 1월 가즈프롬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ANRE)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준비에 합의

○ 일본은 농업분야 및 제조업에도 진출하고 있으나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10여개의 일본 농업기업이 화학농약 사용을 줄여 친환경·효율적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통 홋카이도식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극동에서 1,000ha 규모의 농장을 운영

- 2013년 초 아무르 주의 농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계획에 발맞추어 홋카이도 은행과 아무르 주도 농업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농업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일본의 마쯔다, 도요타 등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블라디보스톡에 자동

차 조립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솔러스(Sollers)社와의 합작투자로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에서는 일·러 합자회사인 에버그린(JGC Evergreen)이 최신 친환경 온실단지를 조성 중이고, 2016년 4월 1단계 사업 완료(2.5 ha) 및 향후 10 ha까지 확대할 계획

- 캉갈라스 선도개발구역에서는 일본 농업기업인 사유리(Sayuri)가 연중 재배 가능한 온실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에 13억 3,500만 루블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

- 자유항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총 606억 1,000만 루블)가 투자 사업(프리모리예 지역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농수산 개발 및 가공을 위한 공동기업 설립 등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 중

□ 일본의 대(對)러시아 정책변화

○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과거 정책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개발 등의 천연자원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

- 과거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및 교역은 사할린 Ⅰ·Ⅱ와 같은 에너지 자원개발에 일본기업이 투자하고 개발된 자원을 수입하는 형태의 천연자원 프로젝트가 거의 전부였음.

- 일부 블라디보스톡 등 대도시에 일본의 중고차 및 소량의 식품류를 수출하는 등 극동지역에서는 제한된 품목의 일본산 제품을 수입

* 일본의 입장에서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러시아 영토이나 기본적인 시각에서 극동지역을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하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영토분쟁과 회복이라는 외교적인 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컸음.

-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극동지역 진출과 투자에 비해 일본은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

○ 최근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

- 일본 정부는 극동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러·일 극동 협력의 최대 난제인 영유권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전략적 접근을 시도

- 2016년 5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8개의 양자 협력 프로젝트를 러시아 측에 제안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극동지역 경제협력과 연계

〈 표 12 〉 러·일 경제협력 8개 분야

주요 분야	세부 내용
첨단 의료시설·병원 설립	일본식 의료 시스템과 첨단 의료시설도입
도시 인프라 개선 및 도시건설	도시 도로교통망 개선 및 주택 건설,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의 도입에서 일본의 경험 공유
중소기업 협력 증대	러·일 간 새로운 기관설립으로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벤처 지원, 직종 간 교류 등 추진 및 활성화
에너지 자원 협력 다변화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개발에서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분야 등 협력분야 다변화
러시아 산업다각화 협력	러시아 산업다각화와 제조업의 생산성 강화 지원
극동지역 제조업기반 구축 협력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제조업기반 육성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강화
첨단기술 분야 협력	원자력, IT 산업 등 첨단산업에서의 기술협력
인적교류, 스포츠·문화 교류	청년층 및 문화계 교류 활성화

* 자료: 각종 자료 종합

- 러·일 정상은 2016년 12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앞서 일본 측이 제시한 8개 과제의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상기의 경제협력 이외에도 양국은 북방영토 문제,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일본 참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

○ 일본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제시한 과제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들과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

- 8대 과제 중 첨단 의료시설 및 병원 설립은 러시아의 낙후된 의료체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극동지역 자유항 내에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연계 가능

* 해당 정책은 다분히 자유항 외국의료기관 유치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조건이 부합할 경우 극동지역에서 빠른 협력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안으로 평가

- 도시 인프라 개선 및 도시건설 프로젝트의 경우도 극동지역의 자유항 도입 및 투자환경개선으로 확장되는 도시환경과 연계

- 에너지 자원 협력 다변화 정책도 극동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으로 이미 ▲사할린Ⅰ(이토추, 마루베니), ▲사할린Ⅱ(미쓰이, 미쓰비시), ▲야말(닛키) 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야말 LNG 프로젝트는 극동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아니며 상기 프로젝트 이외에 사할린Ⅲ에 주요 상사의 참여 타진 중

- 금번 경제협력의 에너지 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단순한 자원개발에 더해 자원개발의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본 상사들의 자본력과 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극동지역 제조업기반 구축 협력의 경우, 제조업유치를 위한 선도개발구역 활용이 적극 가능한 영역으로 러시아 정부의 필요에 적극 대응하는 협력과제임.

* 다만, 현재까지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 투자한 일본 제조업체 수는 적음.

-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의 제도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투자를 회피해왔으나 금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경제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 홋카이도와 사할린 섬의 철도연결 추진 〉

- 2016년 12월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시되었던 협력정책 중 하나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 섬을 철도로 연결하는 계획
  * 이후 사할린은 극동지역의 TSR과, 홋카이도 철도는 도쿄까지 연결 추진
- 두 지역의 해협은 거리가 42km에 지나지 않고 일본은 해저터널을 완공한 경험이 있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나 공사비 조달여부와 건설 후 경제성 확보가 최대 난제
- 동(同)철도가 연결될 경우 한반도를 통해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TKR(한반도 종단철도)는 구심력을 상실하는 결과 초래 우려

○ 대(對)극동 전략에 있어 일본정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음.

- 일본은 극동협력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보다는 철저하게 러시아에게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러일 경협 8대 분야의 내용은 현재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영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평가

- 러시아 경제제재 초기에 일본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 경제협력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 측의 우려를 불식

- 일본은 그동안의 자원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선도개발구역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 간의 협력의 폭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

- 결국 일본의 극동정책은 과거 북방영토 분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던 양국관계를 협력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개하는 협력 프레임의 전환을 의미

Ⅳ 러시아 극동정책의 평가와 한국의 대응

□ 통합적 극동개발 및 동북아 경제권 편입정책의 의미와 한계

○ 푸틴 3기 극동개발 정책의 국내적 추동요인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통합적 개발이라는 명제로 요약되며 다양한 제도를 활용

- 과거 러시아 정부의 개발정책이 불균형 해소와 불균형 인정을 통한 파급효과 확대라는 정책 사이에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재의 극동정책은 국내적으로 불균형 해소와 통합적 개발이라는 대의와 과제로 진행

- 정부의 통합적 개발 정책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기구를 도입하여 단기간 내에 성과를 이루려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남.
  *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경제특구, 극동개발공사, 극동개발펀드 등의 다양한 제도와 기구의 도입이 그 사례임.

○ 극동개발 정책의 대외적 추동요인은 동북아 경제권 편입을 통한 지역 경제 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단계적 성장이 아닌 '비약적 성장(Quantum jump)'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991년 체제전환이후로 진행되어 온 극동개발이 천연자원부문의 개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천연자원 개발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진 결과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관구와의 지역적 불균형 이외에도 극동지역 내에서 천연자원을 가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지역 내 격차도 심화
  * 사할린 섬과 같이 개방초기부터 외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원생산이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지역총생산과 생활수준 격차 심화

- 제조업 투자유치를 통한 동북아 산업생산체제의 편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동북아 경제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그간의 경제적 성과를 뛰어넘는 '비약적 성장'을 추진

○ 러시아 정부정책의 한계는 개발정책이 제도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으며 다양한 제약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

-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투자 목표를 가진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모두 흡수하기에는 역부족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나 단기간의 세금감면을 통한 기업유인 정책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유입에 있어 결정요인이 되기 어려움.

〈 그림 11 〉 극동지역개발의 대내외적 요인과 한계

* 자료: 저자 작성

- 러시아 정부는 세금혜택 이외에도 국제학교 설립추진, 외국계 병원유치 등의 거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입된 제도는 없어 당분간 개선기대 난항

  * 다만, 외국인 근로자 쿼터확대는 도입확정

-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인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데, 세금혜택이 일부 더 큰 것 이외에 타 경제특구와의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음.

- 중국은 1990~2000년대 경제성장에서 자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는 결국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

- 결국,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등 제도들이 동아시아 내 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 등과 비교할 때 투자유치를 위한 우위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이 있어야 할 것임.

o 극동개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세금혜택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및 지원방안 마련

- 타(他)국가 경제특구에 비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의 발굴 및 이를 국제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

- 현재 추진 중인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계 병원유치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제도들의 조속한 시행과 효율적 운영

- 여전히 러시아의 투자행정 시스템은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해 관료적인 측면이 많아 기업투자 원활화를 위한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개선필요

  * 2016년 '비즈니스 환경조사(Doing Business in Russia)'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러시아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순위는 92위('14년)▶ 62위('15년) ▶51위('16년)으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

□ 한국의 극동진출 정책과 기업 시사점

○ 한국의 극동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

- 러시아 경제는 자원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라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국 내 제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산업기반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동지방은 정부정책 실현의 요체가 되는 지역

- 최근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Brexi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新)보호주의 추진 등으로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자국산업 육성과 소(小)지역주의가 대두되는 시기이며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화와 제조업 육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 따라서 한·러 경제협력도 기존의 자원-상품 교환방식의 전통적인 교역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극동지역은 그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의 가치 내재

○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중앙관구 지역과 극동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통상 전략을 이원화(two track)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

- 중앙관구 지역은 러시아내 구매력 있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 소비의 중심지이며 이 지역에 대한 전략은 결국 소비시장에 초점을 둔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 따라서 시장에 초점을 맞춘 러시아 투자의 경우, 극동지역보다는 러시아 인근의 경제특구 등을 활용한 투자가 시장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더 유리

- 이에 비해, 극동지역은 거주 인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수준도 일부 천연자원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스크바 인근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

- 따라서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진출에 대한 교두보 또는 전진기지 역할, ▲인프라 개발 등 현재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전략추진, ▲동북아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체제 구축과 확장 등을 고려할 필요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을 노리고 있으므로 한국은 극동지역의 다양한 투자유치 제도를 활용하여 극동지역을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현재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한 관계로 많은 한국기업들의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극동지역의 초기 개발과정에서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세제상의 혜택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초기 진출을 통한 거점마련 추진

- 극동지역은 중국의 동북 3성 및 몽골의 대외진출을 위한 루트로서 핵심지역이므로 향후 이들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 확대될 것

  * 따라서 극동지역을 통한 중국 동북 3성 진출전략도 추진가능

- 중국과 일본이 극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 간 농업펀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양국이 극동지역에 농업펀드를 마련한 것은 농업개발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극동지역을 농업진출의 거점으로 삼기위한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모색이 필요

  * 기존에 극동지역에 진출한 현대중공업 등의 농업기업이 있으나 판로확보 등의 문제로 여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과 협력방식의 다양화 필요

○ 극동지역은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참여 도모

- 러시아 측이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프리모리예 1·2 사업 등 극동지역에서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또한 극동지역에서는 인근 몽골을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이 활성화되면서 극동지역 항만을 통한 물류 및 운송 시스템의 연계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어 향후 인프라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중·몽·러 경제회랑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6대 경제회랑중 하나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몽골의 '초원의 길'을 연계한 프로젝트간 물류·운송 원활화를 기본목표로 함.

- 현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코트라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고 입찰 등 현지 발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일부 한국기업은 블라디보스톡 외곽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나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많은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모색필요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협력의 대표적인 시범 사업이나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이후 남북관계에 따라 재추진 가능성이 큰 사업

○ 한·러 산업협력을 통한 신(新)동북아 가치사슬구축

- 극동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기존의 중국 위주에서 유라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는 역할수행 가능

-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생산가치사슬은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우리기업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주의 재편에 따라 극동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라시아 신가치사슬' 구축 필요

- '유라시아 신가치사슬'은 극동지역에 러시아가 구축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러시아·한국 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영역에서 제조업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제품생산 추진

〈 블라디보스톡 한국 전용공단 구축 〉

- 한국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공단을 설치하여 대러시아 협상력을 강화하고 극동진출에서 한국기업의 기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한국기업의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특정 연관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블라디보스톡의 광범위한 지역이 자유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단설립에 유리한 입지를 양측이 협의 하에 공동개발
- 선도개발구역 내에 전용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 가능

- 진출기대 사업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식품가공, 수산업 가공 등을 중심으로 초기 진출을 추진하고 이후 다양한 산업분야별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안착에 유리

< 참고 문헌 >

- 문헌 자료 -

김상원. (2010) “러시아의 지역 간 경제격차 문제.”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1, No. 1.

김성진. (2011/2012) “푸틴 집권기 러시아 지역격차의 변화(2000-2008).” 『중소연구』, 제 35권 제 4호.

한홍열 외. (2015) *유라시아 산업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개발 정책방향” 및 “자유항 개발 정책방향” 세미나, 2016.9.28. 국토연구원.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арченко Г. и Мачульская О. (2005) “Инструмеент нов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ксперт*. №. 44 (490).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2-2010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2001)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2-2010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ред. от 22 июня 2006 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1.10.2001 № 717.

Far East Development Fund. (2016) “Far East and Baikal Region Development Fund: Presentation for Partners and Investors.”

Kinossian, N. (2013) “Stuck in transition: Russian regional planning policy between spatial polarization and equalizatio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4, No. 5-6.

Park. Ji Won. (2014) “Suggestion for Cre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Sakhalin region." 2014 Knowledge Sharing Program II with Russia: Improvement of Sakhalin Region's Investment Environment.

Remington, T. F. (2016) "Economic Inequality in Russia: Sources and Consequence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87.*

Repnikova, M. and Balzer, H.(2009) "Chinese Migration to Russia: Missed Opportunitie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urasian Migration Papers No. 3*

The World Bank. (2008)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 인터넷 자료 -

러시아 경제특구청 홈페이지

극동개발공사(JSC Far Eastern Development Corporation) 홈페이지

KOTRA 해외시장뉴스, "극동 러-중국 간 협력강화로 탄력받는 Primoriye 1-2 프로젝트

Vciom, Russia-China-USA: Strategic Triangle Relations, Press release no. 1925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5.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ёт о совещанииоком плксном соци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6, July, 2013,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8824, 검색일: 2016년 12월 26일)

작성자

◈ 글로벌전략지원단 박지원

Global Strategy Report 17-002

러시아 극동지역개발과 한국의 협력방안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글로벌전략지원단 (02-3460-7726)

ISBN : 979-11-6097-216-0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Strategy Report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